

1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주성이 강조될 때, 효과성은 저하될 수 있다.
- ②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제1조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기본가치는 공정성과 민주성이다.
- ③ 행정의 공정성은 ‘같은 사람을 같게’ 취급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정성과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④ 행정의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설

- ① (○) 효과성은 결과만 중시하고 정당한 절차나 과정을 무시할 수 있다. 민주성은 결과 외에도 절차나 과정도 중시하므로 이러한 절차·과정을 거치게 할 경우 효과성 달성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
- ② (×) 민주성과 능률성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

수평적 형평성	① 동일 대상은 동일하게 대우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취급).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결정기준이 되는 특성에 상응하는 같은 양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② 소득·가정환경 등 조건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됨. ③ 적용 레 : 선거의 1인 1표주의(보통선거), 비용부담의 수익자부담원칙(응의주의), 공개경쟁채용시험(실적주의), 비례제제도, 납세와 국방의 의무 등.
수직적 형평성	① 다른 대상은 다르게 대우 (대등하지 않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취급).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동등하게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판단의 기준. ② 이질적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서비스를 배분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기준(주민수요·납세능력·최소한도의 생활수준 등)에 따라야만 형평성이 확보됨. 각 개인의 특성(성별·연령·거주지역·재산 등)상 정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기준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됨. ③ 적용 레 : 공직임용상의 대표관료제(임용할당제), 누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역교부세(재정력이 강한 지방으로부터 취약한 지방으로 교부세를 이전)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재분배정책

답 ②

2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말한다.
- ② 퍼트남(R. D. Putnam)은 네트워크, 신뢰, 규범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 ③ 사회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여 등가물 교환이 이루어진다.
- ④ 사회적 규범을 공유하는 강한 결속력은 집단의 폐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설

- ③ (×)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경제자본의 교환과 달리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며 시간적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신뢰를 주고받았다고 하여 거래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가 준 것만큼 줄어들고 받은 것만큼 늘어나는 zero sum 관계로 나타나지 않음. 오히려 사회자본은 거래 당사자 모두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축적되고 더욱 증가하는 positive-sum 관계로 나타남. 따라서 사회자본은 자기강화적이고 사용할수록 증가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 그러므로 사회자본의 생산과 파괴는 그 사용 정도에 따라 선순환 되기도 하고 악순환 되기도 함.
- ④ (○) 한 집단의 강한 결속과 신뢰는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척, 폐쇄성 등 부정적 효과를 갖게 한다. 즉 높은 결속적 사회자본과 낮은 교량적 사회자본의 결합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결속적 사회자본	집단 내부 구성원들을 결속하게 해 주는 사회자본. 특수한 호혜관계를 뒷받침하고 연대의식을 결집시키는데 유용하나 강력한 내부 충성을 유도하여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교량적 사회자본	집단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집단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개방적인 사회자본. 외부 자산과 연계하고 정보 전파에 유리하지만 정서적 지지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개인 및 집단, 국가 간 협력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

답 ③

3 환경오염과 관련된 외부효과(External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대가나 비용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 한다.
- ② 외부불경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생산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 ③ 환경오염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세, 보조금, 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주로 활용한다.
- ④ 이해관계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코오즈 정리(Coase's Theorem)는 거래비용이 크게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해설

④ (×) 정부개입 없이도 이해관계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코오즈 정리(Coase's Theorem)는 거래비용이 거의 없어 자율적 협상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인정된다.

외부효과

가격기구(시장거래; 대가의 교환)를 통하지 않고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미치는 현상. 외부효과는 비용(비용부담자)과 편익(수혜자)이 불일치를 초래해 재화가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과다 소비·공급되게 됨.

종 류	외부경제(외부편익효과)	외부비경제·외부불경제(외부비용효과)
	긍정적 외부효과, 정(正; ⊕)의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 부(負, ⊖)의 외부효과
의 미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이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적 편익 < 사회적 편익(개인적 비용 > 사회적 비용)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되지 않는 손해·불이익을 주면서도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 비용 < 사회적 비용(개인적 편익 > 사회적 편익)
예	과수원과 양봉업자, 무료예방접종, 지역개발사업 실시와 인근지역 지가상승	공해(화장장·쓰레기소각장과 인근주민), 스팸메일, 도로건설에 따른 인근주민의 소음피해, 불법주차
문제(시장실패)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맡겼을 경우 • 생산의 외부경제: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생산(예 나무심기) • 소비의 외부경제: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소비(예 대중교통이용)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맡겼을 경우 • 생산의 외부비경제: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생산(예 오염물질 방류) • 소비의 외부비경제: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소비(예 옆 사람 담배연기)
정부개입	사회적 최적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정당화 됨	
	보조금 지급(공적 유도) → 더 생산 또는 소비하도록 유인	조세(피구세), 벌금 부과(정부 규제) → 덜 생산 또는 소비되도록 규제
지역이기주의 형태	외부경제효과가 나타나는 시설·정책일 경우 PIMFY(= YIMFY, IMFY) 초래	외부비경제효과가 나타나는 시설·정책일 경우 NIMBY 초래

코오즈정리(Coase's Theorem)

외부효과 문제를 정부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자율적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전통적 시각인 정부개입에 의한 피구세나 보조금과 달리 현대적 시각에서 제시된 내용. 코즈(R. Coase)는 ① 어느 일방에게 소유권·재산권(Property rights)이 잘 정의되어 있고, ② 민간 경제주체인 이해당사자 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합의 도달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이 거의 없이 자원배분에 관한 자율적 협상이 가능하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정부개입 없이 시장에서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최적 생산량 달성)되게 된다고 주장.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산권 설정이 곤란하고, 거래비용·불신이 존재하므로 현실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답 ④

4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니스카넨(W. A. Niskanen)은 미국 국방성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행동을 연구하여 정부실패의 근거를 찾았다.
- ②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규제완화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 ③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장의 상황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 ④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리상의 비효율성을 X-비효율성이라고 한다.

해설

- ① (○) 니스카넨(W. Niskanen)의 예산극대화가설: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모형: 관료들은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한다는 전제하에,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행태를 예산산출함수 및 정치적 수요곡선과 총비용함수 그리고 목적함수를 도입한 수리적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한 니스카넨의 이론모형. 관료들의 행태에 자기이익 극대화 가정을 도입하여, 관료들은 승진·역득·명성 등의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극대화 한다는 것. 정부산출물은 그 결과 적정 생산수준보다 2배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고 주장
- ② (○)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규제완화나 정부보조 삭감 방식으로 대응.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

구 분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사적 목표 설정(행정조직의 내부성)	○(관료이익 추구 제거)		
X-비효율, 비용체증(비용≠수익)	○(민간기업은 효율성 확보)	○(비효율적 보조금 삭감)	○(규제에 따른 비용 감소)
파생적 외부효과		○(불명확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규제로 인한 부작용 방지)
권력의 편재	○(독점적 권력에 따른 특혜 방지)		○(규제를 통한 특혜제공 방지)

- ③ (×)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자원배분의 효율성, 최적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장의 상황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④ (○) X-비효율성이란 서비스 공급이 독점적인 경우 경쟁의 압력을 피할 수 있으나, 조직 내 경영자원을 능률적으로 사용할 유인(誘因)을 잃게 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측면이다. 경쟁의 부재로 인한 관리 및 경영상의 비효율로 X-비효율성이 나타나면 생산량은 줄고 비용은 증가되며, 사회의 후생손실을

초래한다. 정부나 기업이 방만하고 나태한 경영으로 인해 경영상의 효율성 추구 노력이나 유인(incentives)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비효율성으로서, 법적 제도적 요인이 아닌 심리적 행태적 요인(사명감·직업의식의 부족)에 의해 나타나는 관리상·경영상 비효율성을 의미한다(예 무사안일한 근무성향, 소극적인 근무태도).

답 ③

5 관료제의 이념형(Ideal Typ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무실에서의 업무에 시간과 능력을 전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없고 겸직 등을 할 수 있다.
- ② 베버(M. Weber)는 관료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의 근거를 법적 권위에서 찾고 있다.
- ③ 관료제의 직무조직은 계층제의 원칙을 따르며, 직무의 집행은 서류나 문서에 따른다.
- ④ 머튼(R. K. Merton)은 관료제의 역기능이 최고관리층의 통제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해설

- ① (×) 겸임·겸직은 금지되며 전임성·전업성을 특징으로 함.
 - **관료의 전임성(專任性)·전업성(專業性)**: 관료로서의 직업은 잠정적이 아닌 생애의 직업이자 전임직업이므로 겸임은 금지되며, 직무수행 대가로 보수를 규칙적으로 지급받고(봉급의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지위·기능·근무연한이며 주로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한 연공급 지급), 실적과 연공에 의한 승진, 퇴직금 등 직업적 보상을 받으며, 직무에 전념하게 함. 전임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임시직에 비해 업무가 신속·정확하고 장기적으로 업무수행의 비용을 줄임.
- ② (○) **법규에 의한 지배(합법성·공식성)**: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고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되며(직위와 [행정수단] 소유의 분리, 직책의 사유화 불허) 권한 남용이나 임의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짐.
- ③ (○) **계층제[계서제]**: 모든 직위는 피라미드식의 계층 내에 배치되며 상하위 계층은 질서정연한 명령복종체계 구성(엄격한 수직적 업무배분)하고 실적에 대해 한 명의 상관에게 책임을 짐. 계층제의 상명하복제제는 집권적 구조를 형성하고 업무능률을 높이며 정책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함. 또한 질서유지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계층제를 통한 승진은 권력욕구와 성장욕구를 만족시킴.
 - **문서주의**: 모든 직위의 업무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사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문서로 이루어지고 문서로 보관됨. 문서화는 업무의 지속성·계속성·안정성을 유지해주고 객관성·정확성·책임성·예측가능성을 높임.
- ④ (○) 머튼(R. Merton)은 관료제의 역기능은 최고관리층의 통제욕구(demand for control)에서 출발한다고 봄.
 - **머튼(R. Merton)의 관료제의 병리현상 연구**
 - ㉠ **동조과잉(overconformity)에 의한 목표전환(goal-displacement)**: 최고관리층의 통제욕구에 따라 구성원 행태의 일관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SOP·규칙 제정과 그 준수의 지나친 강조는 형식주의, 의식주의(행동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목표전환 초래
 - ㉡ **훈련된 무능력, 타 분야에 대한 이해부족, 좁은 시야, 포괄적 통제력 부족, 할거주의와 귀속주의**

답 ①

6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치·행정 체제의 통제와 조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주장한다.
- ②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탈관료제를 추구한다.
- ③ 총체적 정부(whole of government) 혹은 통합적 정부형태(joined-up government)를 통한 정부의 전체적인 역량 및 조정의 향상을 주장한다.
- ④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있어 민간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해설

- ② (×)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민간의 관리기법 도입과 탈관료제를 추구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 및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조화를 강조한다.
 - 신공공관리론은 조직개편의 방향에서 소규모의 준자율적 조직으로의 분절화를 추구하여 조직칸막이나 할거주의를 확대·강화시켰다. 세분화·경쟁·인센티브라는 핵심가치가 공직에 적용되면서 공무원 개개인이나 부서는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나 정책을 다른 행위자들과 개방·공유·협조를 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글로벌 수준의 변화, 즉 기후변화, ICT나 웹 등의 첨단기술 발전, 위기재난안전, 테러, 질병 등의 문제는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wicked issues or problems)로 변해가고 있다. 난제는 일련의 문제가 복합적·중복적이며, 문제해결에 수많은 다양한 행위자가 개입하므로 사회적 복잡성 수준이 높다. 문제해결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상이한 조직과 영역, 상이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며, 문제 정의와 해결도 다르게 받아들인다. 상호 연계된 이슈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 대한 수용을 어렵게 한다. 난제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일치의 규모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이 필요하며 난제를 처리할 때 정부 조직 경계를 넘는 협업행정이 필요하다. 탈신공공관리론은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총체적 정부 또는 합체된 정부(Whole-of-government or joined-up government initiatives)를 강조하여 행정부서나 기관 간 협력·협업을 주장한다.

☒ 탈신공공관리론의 특징

- ①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Reducing fragmentation through structural integration)
- ②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주장(Asserting recentralization and re-regulation)
- ③ 총체적 정부 또는 합체된 정부의 주도(Whole-of-government or joined-up government initiatives)
- ④ 역할 모호성의 제거 및 명확한 역할 관계의 안출(案出)(Eliminating role ambiguity and creating clear role relationships)
- ⑤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Private-public partnerships)
- ⑥ 집권화·역량·조정 증대(Increased centralization, capacity building, and coordination)
- ⑦ 중앙의 정치·행정적 역량의 강화(Strengthening central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apacity)
- ⑧ 환경적·역사적 문화적 요소에의 유의(Paying attention to environmental, historical, and cultural elements)

	비교국면	신공공관리	탈신공공관리
정부 기능	정부-시장 관계의 기본철학	시장지향주의- 규제완화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 재규제의 주장, 정치적 통제 강조
	주요 행정가치	능률성, 경제적 가치 강조	민주성·형평성 등 전통적 행정가치 동시 고려
	정부 규모와 기능	정부 규모와 기능의 감축 : 민영화·민간위탁	민간화·민영화의 신중한 접근
	공공서비스 제공의 초점	시민과 소비자 관점의 강조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 민간부문을 공공서비스 제공의 공동 생산자 및 경쟁자로 규정, 내부시장화·계약·외주화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
조직 구조	기본모형	탈관료제 모형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조화
	조직구조의 특징	비항구적·유기적 구조 : 임시조직·네트워크 활용, 비계층적 구조, 구조적 권한 이양과 분권화	재집권화 :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조직개편의 방향	소규모의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절화 예) 책임운영기관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총체적 정부 강조, 집권화·역량·조정 의 증대
관리 기법	조직관리의 기본 철학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문의 관리기법 도입 : 경쟁원리 도입, 규정과 규제의 완화, 관리자의 자율성·책임성 강조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
	통제 메커니즘	결과·산출 중심의 통제	
	인사관리의 특징	경쟁적 인사관리 : 능력·성과 기반 인사관리, 경쟁적 인센티브 중시, 개방형 인사제도	공공책임성 중시

답 ②

7 공익(Public Interest)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 ②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 간의 타협과 조정의 과정에서 도출된다고 본다.
- ③ 실체설은 개개인의 이익은 공동체의 공동선에 종속되며,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 ④ 과정설은 공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독자적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해설

④는 실체설의 특징이다. 과정설에서는 정부의 활동이 중립적 조정자 역할로 제한된다.

☒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비교

학설	실체설·규범설·적극설	과정설·소극설
공익개념	선험적(先驗的) 개념. 일원적·실체적·적극적 개념 전체효용극대화, 절대가치, 공유의 이익, 보편성	경험적(經驗的) 개념. 다원적·과정적·소극적 개념. 다수 이익 간 조정·타협의 산물, 적법절차의 준수
공익과 사익	공익은 사익과 본질적·질적 차이가 있음 사익을 초월한 공익의 존재(Σ사익 ≠ 공익) -사익은 공익으로 전환 불가 -정의, 도덕, 양심, 일반의사 등 실체적·도덕적 개념 공익과 사익을 명확하게 구분 사익보다 공익이 중요, 공익과 사익 간 갈등 없음	공익은 사익과 상대적·양적 차이만 있음 사익이 고려되지 않는 공익은 없음 -사익을 공익으로 전환 가능. 공익개념의 가변성. -공익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 간 타협·조정 의 결과 공익과 사익의 명확한 구분 곤란 공익과 사익은 갈등관계에 있음
사회체제	투입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	다원화된 선진국
사상	전체주의·집단주의(참여 무시)	현실주의, 개인주의(참여 중시), 다원주의
공익결정자	행정인(소수 엘리트)의 적극적 역할 국가는 우월적 지위에서 목민적(牧民的) 역할	행정인은 소극적 역할만 담당 국민주권주의에 의한 행정의 조정자 역할
이념	능률성·전문성 강조	민주성 강조
정책 과정	국방·외교정책과 관련 국가주의(statism), 정책결정의 합리모형·엘리트론	교육·복지정책과 관련 정책결정의 점증모형·다원주의

답 ④

8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한시적 면제 또는 유예를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 ② 규제등록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처리기간 등을 국무총리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 ③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그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설

① (○) • 규제샌드박스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
내용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 연계 운영 : 외국은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하여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확인'도 추가 운영.
	실증특례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의 실증테스트를 허용.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
	임시허가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
신속확인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② (×)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③ (○) 규제존속기한·재검토키한 명시(규제일몰제) :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의 신설·강화시 계속 존속시킬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해 법령 등에 규정해야 하며 규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1항, 2항).

④ (○) 규제영향분석 : 규제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중앙행정기관장은 규제의 신설·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 포함)시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함(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사).

답 ②

9 정책분석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황의존분석(contingency analysis)은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모형 외부에서 작용하는 배경 변수나 환경적 요인들보다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 수치가 변화할 때 대안의 결과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 ② 악조건 가중분석(a fortiori analysis)은 예비분석이나 현재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정책대안에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 하고, 나머지 대안들은 최선의 상태를 가정하여 각 대안들의결과를 다시 예측하는 방법이다.
- ③ 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은 악조건 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상황을 가정해보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 ④ 휴리스틱스(heuristics)는 엄밀한 계산이나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개괄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일반적인 발견기법들(직관적 판단, 상식,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적 발견법, 주먹구구식판단, 발견적 학습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해설

① (×) • 원인변수 변화에 대한 결과변수의 민감한 반응 정도의 분석

- ┌ 원인변수가 내생변수(모형 내 통제 가능한 변수, 정책변수)인 경우 : 민감도 분석
- └ 원인변수가 외생변수(통제 불가능한 외적 변수, 환경변수·조건변수)인 경우 : 상황의존도분석

•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 정책대안의 결과들이 모형 상의 변수(parameter)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파악하는 분석. 어떤 값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추정 상 어떤 오차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원래의 분석에서 사용해야 할 변수값 대신 다른 변수값으로 대처하여 이것이 대안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분석방법.

• 상황의존도분석(contingency analysis of test) : 민감도분석과 유사하나, 한 모형에서 파라미터의 변화가 아니라 외생변수나 조건변수의 변화에 따라 정책대안의 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답 ①

10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 또는 정책흐름 모형(Policy Stream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쓰레기통 모형의 아이디어를 정책의제설정 또는 정책변동에 적용시킨 것이다.
- ②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은 일상에서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 ③ 세 가지 흐름이 특정한 계기를 바탕으로 결합할 때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린다.
- ④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는 정책의 창을 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해설

- ② (×) 문제흐름(problem stream), 정책흐름(policy stream), 정치흐름(political stream)이 상호 독립적으로 방만하게 흘러 다니다가(상호의존적 흐름) 일정한 상황에서 우연히 만날 때(coupling) 정책의 창이 열리며 정책의제설정이나 정책결정이 이뤄진다고 본다.
- ④ (○)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s, 정책선도자)는 세 가지 흐름을 합류·합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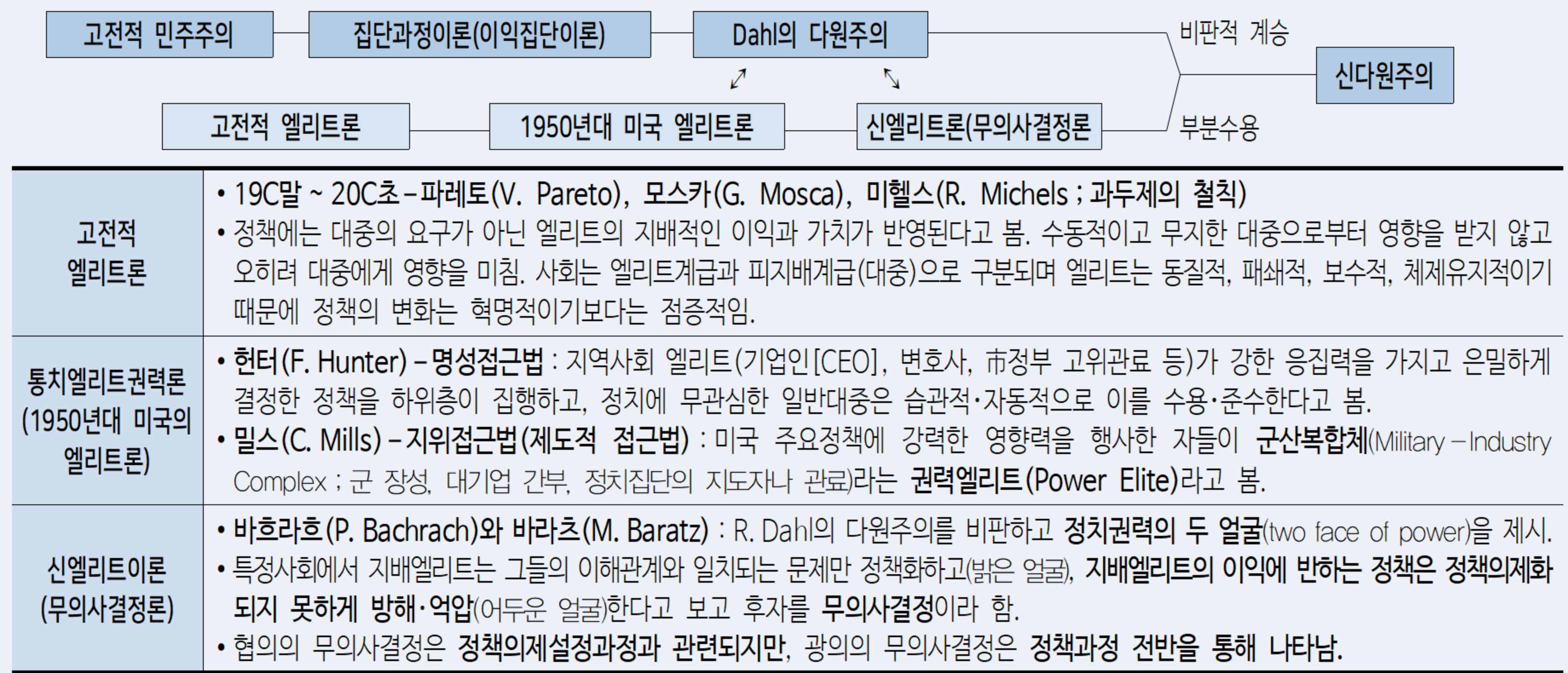
답 ②

11 신엘리트론 또는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의사결정이란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회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는 달(R. Dahl)의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신엘리트론을 형성하였다.
- ③ 넓은 의미에서 무의사결정은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
- ④ 밀스(C. W. Mills)는 지위접근법을, 헌터(F. Hunter)는 명성적 접근법을 통해 엘리트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해설

- ④ (×) 밀스(C. W. Mills)의 지위접근법과 헌터(F. Hunter)의 명성적 접근법은 신엘리트론(무의사결정론)이 아님



답 ④

1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Nakamura & F. Smallwood)의 정책 집행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에게 기술적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유형이다.
- ②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에게 기술적·행정적 권한을 위임하는 유형이다.
- ③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와 목표 또는 목표 달성 수단에 대해 협상하는 유형이다.
- ④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결정자가 형식상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자는 정책결정의 권한을 장악하고 정책과정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해설

- ③ (×)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가 구체적 목표설정 및 집행수단을 개발하도록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함.

※ 나카무라(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고전적 기술 관료형 (classical technocr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구분, 결정자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들은 이 목표를 지니. • 결정자는 계층제적(위계적) 명령구조를 형성하고, 특정 집행자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권한만 위임. • 집행자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술적 문제 정도에서만 미약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 • 결정자가 결정한 정책내용을 집행자가 충실히 집행. 결정자가 정책집행자들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함. • 집행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지님.
지시적 위임자형 (instructed deleg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자들에게 위임됨. • 결정자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는 목표의 소망성에 동의함. • 정책결정자는 정책의 목표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집행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정책집행자는 그러한 목표를 받아들이고, 다만 수단의 선택시에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지니게 됨. • 집행자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관리적]·협상적[교섭적] 능력을 소유.

협상자형 (bargai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간 반드시 정책목표나 수단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공식적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제시하지만, 집행자와 목표의 소망성에 대해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결정자와 집행자 간, 집행자 상호 간 목표와 수단에 관해 협상하며, 힘과 협상력이 우월한 집단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됨. 집행자들이 결정자들의 권위에 쉽게 압도당하지 않을 때 나타남. 				
재량적 실험가형 (discretionary experimen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결정자가 정책수립 능력이 없고, 집행자에게 광범한 재량을 위임하려는 유형. 정책결정자는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정보·기술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 수준에 그침(결정자는 추상적인 일반 목표는 지지하지만,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능력이 없음). 결정자는 집행자에게 목표를 구체화하고, 집행수단을 개발하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집행자들은 정책목표의 구체화, 수단 선택, 정책 시행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 집행자는 과업의 수행의사와 수행능력이 있음. 				
관료적 기업가형 (bureaucratic entreprene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권한을 장악하고 정책과정을 완전히 통제 집행자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권력을 동원하여 결정자가 받아들일도록 설득이나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집행자는 그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며 달성할 능력도 보유. 집행자는 결정자와 협상·홍정하여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얻어낼 수 있음. 				

구분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자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정책목표	추상적 목표	결정자	결정자	협상 결과에 따라 역할 분담	결정자
	구체적 목표	결정자	결정자		집행자
정책수단	행정적 수단	결정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기술적 수단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정책집행자의 재량	재량권 적음 <			> 재량권 많음	
정책평가기준	효과성	효과성, 능률성	지지자의 만족도	수혜자에 대한 대응성	체제유지도

답 ③

13 전통적 델파이(Delphi)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응답의 통계값으로 평균만 제공한다.
- ② 집단토론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의사전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 ③ 익명성을 바탕으로 조사되어 통제된 환류를 수행하는 반복된 과정을 통해 전문가 합의를 유도한다.
- ④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개발되어 다양한 예측활동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해설

① (×), ③ (○) 익명성 보장은 이뤄지지만, 응답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요약수치(집중정도·확산정도·빈도분석) 형식으로 표현되어 제공된다. 반복된 응답, 응답결과의 통계처리를 통한 피드백과 재응답 과정을 거쳐 참여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평균값을 찾는다(전문가의 합의 유도).

② (○) 델파이기법의 등장배경 : 회의·토론 방식(위원회, 집단토의)의 한계(구성원 간 개인적 역할관계의 영향, 갈등이 심하고 토의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주관적 판단을 저해. 체면이나 타인에게 주는 인상을 의식하여 진정한 의견을 감추거나, 일단 표현한 의견을 고집하는 경향)

④ (○) 1948 랜드(Rand) 연구소에서 고든(T. Gorden)과 헬머(O. Helmer)가 개발.

답 ①

14 경쟁적 가치 접근법(Competing Values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퀴와 로보그(R. E. Quinn & J. Rohrbaugh)는 조직의 효과성은 이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이익과 가치에 크게 의존한다고 주장 하였다.
- ② 이 접근법은 조직구조가 통제를 강조하는지 유연성을 강조하는지와 조직의 초점이 인간인지 조직 자체인지를 기준으로 네 가지 효과성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 ③ 네 가지 조직효과성 평가모형은 개방체제 모형, 합리적 목표 모형, 내부과정 모형, 인간관계 모형이다.
- ④ 이 접근법은 창업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모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고, 집단공동체 단계에서는 합리적 목표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해설

②③ (○)

구분	초점		
	내부지향 - 인간·과정(구성원의 복지·발전·성장)	외부지향 - 조직(조직의 생산성, 조직 자체의 발전)	
구조	유연성(변화·적응·혁신) 중시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통제(안정성·질서·예측가능성) 중시	내부과정모형	합리목표모형

④ (×) 집단공동체 단계에서는 인간관계모형이 적합하다고 봄

☒ 조직의 수명주기단계(life cycle stage)와 적합한 조직효과성 모형 - 퀴와 카메론(R. Quinne & K. Cameron)

조직의 수명주기단계	① 창업단계	② 집단성 단계	③ 공식화·통제 단계	④ 구조정교화 단계	⑤ 쇠퇴단계
적합한 조직효과성 모형	개방체제모형	인간관계모형	내부과정모형, 합리목표모형	개방체제모형	

답 ④

15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단순구조(simple structure)는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집권화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적합하다.
- ㉡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핵심운영 중심의 구조이며,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 ㉢ 사업부 조직(divisionalized form)은 참모 중심의 구조이며, 신축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구조이다.
- ㉣ 핵심운영 부문(operating core)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 ㉤ 지원 스태프 부문(support staff)은 기본적인 과업흐름 내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를 지원하는 모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 (○) 단순·동적인 환경 하의 초창기 소규모 조직으로서, 최고관리층에 권력이 집중(높은 집권화)되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적합하다. 분화와 공식화 수준이 낮아 유기적 구조를 지니며 높은 융통성을 지닌다.
- ㉡ (○) 전문적 관료제는 외부통제가 거의 없는 복잡·안정된 환경 하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는 핵심운영층(작업계층 : operation core)이 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 참모 중심의 구조이며, 신축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구조는 임시체제(adhocracy)이다. 사업부제(분화형태조직, 할거적 형태 ; divisionalized form)는 중간계선이 지배적이며 중간관리자들이 부서를 단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다.
- ㉣ (○), ㉤ (×) 지원 스태프 부문(support staff)은 기본적인 과업흐름 이외의 조직의 문제를 지원하는 모든 전문가로 구성.

※ 조직의 구성부분(Components)

- ① 최고관리층(전략정점 ; strategic apex) : 조직에 관한 전반적 책임을 지는 자 → 집권화 경향
- ② 기술구조(technostructure) : 작업설계의 변경, 과정계획, 직원훈련담당전문가 → 표준화 경향
- ③ 작업중추(핵심운영층·운영핵심 ; operation core) : 재화·용역 생산의 기본작업에 직접 종사 → 전문화 경향
- ④ 중간계선(중간관리층 ; middle line) : 작업중추와 최고관리층을 연결 → 자기부서의 할거적 지배 강화(분권화, 사업단위분립)
- ⑤ 지원참모(support staff) : 위 네 부분에 대한 지원업무(공보실, 법률고문, 조사연구실). 기본적인 과업흐름 이외의 조직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전문가로 구성 → 협동성·혁신



답 ①

16 학습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습조직은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에게 정보가 공유된다.
- ② 학습조직은 자신과 타인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활동을 높게 평가한다.
- ③ 학습조직은 외부 특정 전문가를 중시하기보다는 조직구성원 모두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도움을 제공한다.
- ④ 학습조직은 비공식적이거나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학습보다는 공식적이거나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활동을 강조한다.

해설

- ④ (×) 학습조직은 외부 특정 전문가를 중시하기보다는, 조직구성원 모두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습조직은 공식적이거나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활동보다, 비공식적이거나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학습활동을 강조한다.

학습조직의 특징인 것	학습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
개인적 권력(지식에 기반한 전문적 권력), 자기완성(개인적 숙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조직적 권력(계층제적 권력) 단일분야의 전문성
집단적 학습(팀 학습), 조직적 학습, 사회적 학습 중시	개인적 학습
비공식적·비정규적·자발적 학습 중시	공식적·정규적 교육·훈련 중시
협력·일체감·공생 / 조직간 경계의 최소화(강력한 조직문화)	경쟁 / 조직간 경계의 명확화
팀워크와 조직 전체를 강조하는 이윤공유 보너스(profit-sharing bonuses)와 지식급(pay for knowledge ; 지식 수준 및 지식투자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개인적 성과급
변화·변동(안정적 상태의 상실), 변화를 위한 학습	안정, 조직의 자기정체성

※ 학습조직의 특성(Daft 등)

- ① **사려 깊은 리더십(mindful leadership)** : 학습행위는 구성원의 자발적·주체적 노력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학습조직의 리더는 '구성원의 기본행태를 안내할 조직의 목표·사명·핵심가치에 대한 통치이념을 설계하는 **사회건축가(social architecture)**', '**역할과 공유비전(shared vision)의 창조자**', '조직의 임무와 구성원을 지원하는 데 헌신하는 **봉사자(servant leadership)**'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 ② **기본구성단위는 팀** : 조직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학습조직의 기본 단위는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기능팀(cross-function team)**. 수직적 구조는 구성원 상하 간 거리감을 발생시키므로 수평적 구조를 강조.
- ③ **수평적·분권적 조직구조** : 급변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필요한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경계와 계층을 제거한 **네트워크 조직과 가상조직을 활용**하며 수평적·분권적 구조를 강조.
- ③ **조직구성원에 대한 권한부여(empowered employees)** : 학습을 촉진하고 시행착오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강화시켜 줌으로써 내적 동기를 부여하고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
- ④ **협력적 Network를 통한 전략 수립** : 전략은 중앙집권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등장함. 고객 및 공급자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일선의 조직 구성원이 조직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공급자나 경쟁자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음.
- ⑤ **체제론적(시스템적) 사고** : 개인학습으로 얻은 지식·정보·기술·경험 등이 팀 학습을 통해 소규모 조직단위의 집합적 학습으로 바뀐 후 전파 및 공유 활동을 통해 조직학습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적 사고를 중시. 따라서 **부분보다는 전체가, 개인의 능력보다는 조직의 능력이, 개인적 학습보다는 사회적 학습이 중요.**
- ⑥ **경계의 최소화와 강력한 조직문화(strong culture)** : 시스템적 사고를 위해 부서 간 경계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공동체 정신과 조직구성원 상호 간의 동정과 지원 정서(상호호혜), 공동생산, 협력, 일체감을 강조하는 강력한 조직문화를 지향.
- ⑦ **정보공유(share information)** : 조직 구성원이 문제의 인지와 해결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하므로 조직의 공식 자료는 항상 조직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고, 조직 구성원 간에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장려.
- ⑧ **보상체계** : 개인별 성과급 보다는 팀워크와 조직 전체를 강조하는 **이윤공유 보너스(profit-sharing bonuses)와 지식급(pay for knowledge ; 지식수준 및 지식투자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제도를 도입.**
- ⑧ **비공식적·자발적 학습** : 학습조직은 외부 특정 전문가를 중시하기보다는, 조직구성원 모두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도움을 제공. 따라서 학습조직은 공식적이거나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활동보다, 비공식적이거나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학습활동을 강조.
- ⑩ **관계지향성, 집합적 행동** :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을 장려하며 학습은 **공동참여와 공동생산**에 기반을 둬. 공유된 의문 및 통합적인 인식과 같은 방법을 통해 목표를 확인.
- ⑪ **유동적 과정** : **안정적 상태를 가정하지 않으며**, 변화를 위한 학습역량을 형성하고, 온라인 또는 대면적 학습에 기초한 미래 행동의 기반을 구축.
- ⑫ **개인적 권력 강조** : 관료제는 조직적 권력(계층제적 권력)을 강조하나 학습조직은 개인적 권력(지식에 기반한 전문적 권력)을 강조. 이러한 권력에 기초한 조직은 조직구성원 및 관리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적·체계적인 학습을 증진시키는데 충분한 신속성을 지님.
- 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필요, 모든 구성원이 지식창출의 주체** :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련 업무에 따라 자유로운 이동과 참여가 가능. 상사와 부하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신뢰와 목표 공유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 권한은 분권화되며 모든 구성원이 지식창출의 주체.

답 ④

17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성원의 비공식적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조직 외부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 ② '젓소 사회학(cow sociology)'이라며 비판받기도 하였다.
- ③ 호손(Hawthorne)실험을 통해 자생적(비공식적) 집단이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④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행태과학 연구를 촉발하였다.

해설

- ① (×) 인간관계론은 조직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체제적 시각의 이론.
- ② (○) **젓소사회학(cow sociology)** : 만족한 소가 많은 우유를 생산하듯, 만족한 노동자가 많은 산출을 낸다는 수단적 인간관인 인간관계론에 대한 비판. 보다 세련된 착취방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임.
- ③ (○) 호손실험을 통해 실제 작업 조건과 작업 효율성과 사이에 직원들의 감정과 의욕 등 주관적 태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태도는 자연발생적인 비공식적 인간관계, 비공식 집단의 집단규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 ④ (○) 행정의 인간화·민주화를 강조(인사상담·고충처리·제안제도 도입, 민주적 리더십, 하의상달 중시 등)하고 행태과학발전에 공헌하였다.

답 ①

18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설조직의 경우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집권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 ②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집권성 정도가 높은 조직구조가 적절하다.
- ③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적응력은 떨어진다.
- ④ 교통·통신기술의 발전은 집권화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해설

①④ (○)

※ 집권화와 분권화의 촉진요인

집권화의 촉진요인	분권화의 촉진요인
① 위기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 필요 시 ② 조직활동의 일관성·통일성이 필요한 경우 ③ 하위조직간 의존도는 높는데 횡적 조정은 어려울 때(갈등 조정) ④ 소규모 조직(구성원 수가 소수), 신설조직(조직의 역사가 짧을 때) ⑤ 재정자원의 규모 증대, 중요도가 높은 결정사항 ⑥ 특정 기능에 대한 조직 내외의 관심 증대 ⑦ 권위주의적 문화 ⑧ 규칙·절차의 합리성·효과성에 대한 신뢰 증가(공식성 증가) ⑨ 일의 전문화, 능력 향상을 수반하지 않은 분업의 심화, 기능 분립적 구조설계(조정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⑩ 교통·통신의 발달 로 상급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집중될 경우(단,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분권화 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⑪ 하급자·하급기관의 역량 부족	① 기술 및 환경 변화의 복잡성·동태성 증가(조직의 적응성 필요) ② 조직이 속한 사회의 민주화 촉진 ③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동기유발 전략 ④ 조직의 쇄신과 개인적 창의성 발휘 ⑤ 조직참여자에 대한 힘 실어주기(empowerment)의 요청 ⑥ 조직 규모의 확대(대규모 조직 - 구성원 수 다수) ⑦ 구성원의 인적 전문화 및 능력 향상 ⑧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상황적응적인 서비스 요청 ⑨ 최고 관리자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장기계획이나 정책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자 할 때 ⑩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② (×) 조직규모가 커지면 통제와 감독이 어렵고 관리층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분권화가 요구된다. 조직 규모와 집권성은 역(逆)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 조직구조의 상황변수와 기본변수의 관계

기본변수	구 모		기 술		환 경	
	대규모	소규모	일상적(정형적)	비일상적	확실	불확실
복잡성	↑	↓	↓	↑	↑	↓
공식성	↑	↓	↑	↓	↑	↓
집권성	↓	↑	↑	↓	↑	↓

③ (○)

공식성의 장점	공식성의 단점
㉠ 행정의 예측가능성·안정성·일관성 향상 ㉡ 공정성·객관성·공평성·평등성 ㉢ SOP를 통해 업무수행 시간·노력 절약, 신속한 과업수행 ㉣ 조직구성원의 행위 규제 - 관리자의 직접적 감독 필요성 감소, 행동의 통일성 확보	㉠ 번문옥례, 동조과잉에 따른 목표전환 ㉡ 행정의 경직성, 환경변화에의 신속성·적응성 저하 (공식화 수준은 조직변동률과 역의 상관관계) ㉢ 구성원의 소외감, 비인간화 ㉣ 구성원의 자율성·창의성·재량성 제약

답 ②

19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준운영절차(SOP)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 ② 행정조직 간 종적 횡적·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 ③ 의사결정자가 일체감을 느끼는 외부의 준거집단은 합리적 의사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 ④ 의사결정자의 자기 경험에의 지나친 의존과 선입견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

해설

① (×) 표준운영절차(SOP)에 의존한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제약요인이다. 표준운영절차(SOP)는 정책의 쇄신을 저해하고 선례를 따르게 한다.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여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기존의 방식과 절차에 얽매게 된다.

• 합리적·분석적 결정의 제약요인

구 분	합리적·분석적 결정의 제약요인	제약요인 아닌 것
구조적 요인 (정책결정 구조)	① 정보·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정보분석에의 시간소비로 인한 결정지연 ② 집권적 조직구조 :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극히 제한된 수의 대안만 논의 ③ 계선과 참모의 갈등과 정책참모기관의 약화 ④ 정책전담기구의 결여 : 정책분석·수립·집행에 대한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 부재 ⑤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집단사고방식) : 소수 개인이나 집단의 감정·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음 ⑥ 부처할거주의, 관료제의 역기능 :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정보의 신속한 전달 저해 ⑦ 행정선례와 표준운영절차(SOP)에의 의존	① PMIS, 행정정보화 ② 분권적 조직구조 ③ 막료(참모)조직의 증가 ④ 정책공동체의 운용 ⑤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성 ⑥ 선례·관례의 무시
인간적 요인 (정책결정자)	① 가치관·태도·성향의 차이 : 갈등과 대립으로 합리성 저해 ②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 상호 간의 의사전달이 무시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토의가 불가능 ③ 인지능력의 한계, 능력·시간·전문지식의 부족 : Simon의 행정인, 제한된 합리성 ④ 병리적 관료행태 : 변동에의 저항, 쇄신·발전에 대한 무관심,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⑤ 자기 경험, 과거의 경력이나 사무처리방법의 영향, 선입관의 작용	합리인·경제인(전지전능)

환경적 요인	① 사회문제와 목표의 다양성과 무형성 : 해결하려는 문제가 복잡·다양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② 투입기능의 취약성 : 국민의사 반영의 곤란 ③ 매몰비용(sunk cost) 고려 : 매몰비용은 장래의 새로운 대안선택범위를 제약함. ④ 피동적인 사회문화적 관습의 영향 : 국민의 의식수준 부족 또는 무관심 ⑤ 외부준거집단의 영향력, 행정문화의 비합리성, 이익집단의 압력의 불균형 ⑥ 정치적 반대(대내외 참여자간 이해관계 대립)와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제약	① 문제의 단순성 목표의 유형성·구체성 ② 투입기능의 강화 ③ 매몰비용 경시·무시
분석 논리 ·기법상 약점 (이론·모형 활용시 한계)	① 많은 시간과 비용 소모 ② 계량화 곤란 : 대안의 비용과 효과의 양적 측정 곤란 ③ 미래예측의 곤란성, 정보의 불확실성 ④ 정책목표의 다양성·추상성·무형성 ⑤ 인과관계와 추론의 곤란성 : 정책실험의 타당성·실현가능성의 한계, 이론·모형화의 한계 ⑥ 대안 간 평가기준 간 모순·충돌과 정책대안평가의 주관성(가치판단문제)	

답 ①

20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머슬로우(A. H. Maslow)의 5단계 욕구계층 가운데 세 번째인 ‘소속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growth needs)가 아닌 결핍의 욕구(deficiency needs)로 분류된다.
- ② 대부분의 사람은 조직 문제를 해결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중 Y이론이 지닌 인간본질에 대한 기본 가정이다.
- ③ 브룸(V. H. Vroom)은 조직 내 개인의 동기부여를 유의성(V : valence), 수단성(I : instrumentality)과 주관적 기대감(E : expectancy)의 함수관계로 설명하는 기대이론을 정립하였다.
- ④ 샤인(E. Schein)은 인간은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지닌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직의 관리자는 일종의 진단자가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해설

① (○) 머슬로우(A. H. Maslow)의 5단계 욕구계층 중 성장의 욕구(growth needs)는 자아실현욕구만 해당되며 나머지는 결핍의 욕구이다.

결핍욕구(Deficiency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사회적욕구(애정·소속 욕구)	존경(자긍)욕구	자아실현욕구(자기실현욕구)
저위욕구(Lower-order Needs)			고위욕구(High-order Needs)	

- 성장욕구(Growth Needs) : 무엇인가 결핍되어서라기보다는 성장하고자 해서 발생하는 욕구. 자아실현욕구
- 결핍욕구(Deficiency Needs) : 무엇인가 부족(결핍)하기 때문에 느끼는 욕구. 생리적욕구·안전욕구·사회적욕구·존경욕구
- 저위욕구(Lower-order Needs) : 주로 외부요인(임금, 고용기간) 등에 의해서 충족됨.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
- 고위욕구(High-order Needs) : 자신의 내부요인에 의해 충족됨. 사회적 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

③ (○) 브룸(V. H. 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동기부여의 강도는 기대감(expectancy), 수단성(instrumentality), 유의성(valence) 간 곱의 함수관계로써 하나라도 0이면 전부 0이 된다. 동기부여의 강도 $M = f(V \cdot I \cdot E)$

④ (○) 샤인(E. Schein)은 네 가지 인간관으로 구분하고 복잡인을 현대사회에 가장 적합한 인간관으로 보았다. 복잡인관에 따르면 인간은 단순하게 일반화·유형화할 수 없는 복잡한 존재이며 인간의 욕구는 복잡하고, 변하기 쉬우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조직 관리자는 진단가(diagnostician)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관	고전이론	신고전이론	현대조직론	
	합리적·경제적 인간	사회인	자아실현인(자기실현인)	복잡인(복합인)
인간의 특성	① 인간의 합리적 타산적 측면 ② 인간욕구의 획일성(경제적 욕구) ③ 인간의 피동성 ④ 동기부여의 외재성(경제적 유인)	① 인간의 비합리적·감성적 측면, 인간의 집단성·사회성 ② 인간욕구의 획일성(사회적 욕구) ③ 인간의 피동성 ④ 동기부여의 외재성(사회적 유인)	① 인간욕구의 다양성(복수 욕구) ② 자아실현욕구를 가장 중시 ③ 인간의 능동성·적극성 ④ 동기부여의 내재성(자아실현)	① 인간욕구의 다양성 ② 인간욕구의 변이성·가변성 ⇒ 정형화·유형화 곤란
관리 전략	교환모형 • 관리자는 통제자 역할 • 경제적 유인과 직무수행의 교환 • hard approach(당근과 채찍) • 엄격한 감독·통제	교환모형 • 관리자는 중개자(intermediary) 역할 • 사회적 유인과 직무수행의 교환 • soft approach(연성관리 ; 사회적 욕구의 충족) • 중간관리층의 역할 중시, 집단 존중 관리	통합모형(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통합) • 관리자는 촉진자·촉매자·면접자 역할 • 교환모형·수용모형 • 통합형 관리(신뢰·협동관리) • 보람 있는 일과 성장기회 제공	상황조건적합적 관리(융통성 있는 관리) • 관리자는 진단가(diagnostician) 역할 • 개인의 욕구에 따라 상이한 관리전략 • 구성원의 욕구의 변이성·개인차 인식

※ 정답여부 : 정답은 ③으로 발표되었다(세 요소의 곱의 함수관계로 보아 틀린 지문이라고 출제된 듯함). 그러나 ③은 ‘함수관계’라는 표현만 있을뿐 그 함수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틀린 표현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정답 없음으로 본다.

답 없음

【관련기출】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 경찰간부

- ① 애덤스(J. Adams)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공헌도(투입)와 보상(산출)을 준거인물과 비교해 불공정성을 느끼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본다.
- ② 포터(L. Porter)와 로러(E. Lawler)는 인간의 동기유발요인으로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나누어, 내재적 보상은 경제적 이익, 승진 등 같은 개인의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 ③ 포터(L. Porter)와 로러(E. Lawler)는 조직 내 구성원은 노력에 대한 보상의 유의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노력이 바람직한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을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가정했다.
- ④ 브룸(V. Vroom)은 조직구성원의 동기는 기대(expectancy), 수단성(instrumentality), 유인가(valence)라는 3가지 요소의 값이 각각 최댓값이 되면 최대의 동기부여가 되고, 각 요소 중 하나라도 0이 되면 전체 값이 0이 되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설

② (×) 경제적 이익, 승진은 외재적 보상

답 ②

2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와 행정은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불편부당한 직무 활동을 통하여 공익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실적주의가 정착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
- ④ 지나친 정치적 중립의 강조는 공무원집단을 오히려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해설

②는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

☒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과 한계

필요성·중요성·장점	①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은 공익을 옹호하고 증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특정 정당의 이익에 편협하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해야 함. ② 정치적 개입에 의한 낭비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며 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③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행정의 안정성·계속성, 능률성·전문성 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무원의 대표성 확보(x)
한계·단점(정치적 중립의 완화 필요성)	① 공무원의 참정권 제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하여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함. ② 정당정치 발전 저해: 정당정치 발전과 정당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 곤란 ③ 참여적 관료제의 저해: 공무원의 정치참여 제한으로 공무원집단의 이익이 경시되고, 중·하위 공무원의 정책형성에 대한 참여기회 및 대내·외적 의사표현기회를 넓혀주는 참여적 관료제의 발전을 저해. ④ 대응성 저해와 관료제의 폐쇄집단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 요구는 공무원의 이념적·정책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정부관료제를 환경의 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폐쇄집단으로 만들 수 있음. ⑤ 행정책임 강조와의 모순: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율적 책임 등 행정책임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임. 지나친 정치적 중립은 관료제의 책임회피·무사안일을 야기함. ⑥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의 가능성 문제: 공개경쟁에 의한 공무원 충원은 특정집단, 중산층 이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이 곤란. 공무원 구성상 출신성분 등의 조화·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의 이익을 편향되지 않고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확보는 곤란함. ⑦ 행정과 정치 분리의 비현실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이론은 정치·행정2원론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의 유물이므로 정치·행정1원론이 지배적인 오늘날에는 부적합함. ⑧ 타율적·외재적 통제의 한계: 오늘날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내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타율적·외재적 통제인 정치활동의 법적 제약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음.

답 ②

22 탄력근무제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 ② 업무시간에 대한 자율성 부여로 근로의욕 고취
- ③ 기관간 부서간 업무 연계 향상
- ④ 통근 혼잡 회피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해설

③ (×) 기관간 부서간 업무 연계가 높을수록, 상시근무가 많은 업무일수록 유연근무제 적용이 곤란하다. 유연근무제는 상대적으로 부서 또는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적어 조직운영의 독립성이 높은 업무에 적합하다.

• 탄력근무제(유연근무제) : 공직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활용할 수 있는 제도.

(1) 장점

- ①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저출산 대응
- ② 업무성과 향상(업무과정에 대한 통제보다는 업무결과와 성과를 강조(result-oriented)하는 문화의 확산)

- ③ 업무집중도, 조직·직무만족도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 ④ 출퇴근시간 조절시 통근시간대 교통혼잡·집중 회피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2) 단점

- ① 기관간 부서간 업무 연계가 높을수록, 상시근무가 많은 업무일수록 유연근무제 적용 곤란
- ② 업무공백 유발, 업무수행 지연 초래 우려, 업무연속성 담보 곤란, 다른 동료의 업무 부담
- ③ 일과 생활의 구분이 모호해 질 수 있음.
- ④ 비정규직 양산과 일자리 질의 저하 우려.
- ⑤ 조직관리의 곤란성 :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성과에만 집중, 보수·수당·승진 등에서 평가기준이 모호해져 차별 발생 가능, 조직 내 유기적 의사소통 감소, 근무태만에 대한 통제 곤란.
- ⑥ 기타 : 상관과 동료의 눈치, 업무성과 하락시 유연근무자에게로 책임 전가, 유연근무자에 대한 과도한 업무량 편중, 조직생활의 고립, 고용안정성에 대한 위협.

답 ③

23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적주의가 공직제도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면서 민주적 대응성이 강화되었다.
- ② 미국은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Act)을 통해 공무원 임용에 있어 공개시험제를 확립하였다.
- ③ 실적주의의 개념은 1900년대 초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방어적·소극적 인사관리 개념으로 바뀌었다.
- ④ 실적주의의 내용은 펜들턴법 제정 이후 변화가 없다.

해설

- ① (×)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의 요구로 인해 관료집단이 국민의 요구에 둔감한 폐쇄집단화할 수 있고, 국민에 의한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민주통제가 곤란하므로 상대적으로 민주적 대응성은 약화되었다.
- ② (○) 미국은 펜들턴법을 통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시험내용은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것, 즉 총원될 직무의 요구조건에 직접 관련된 내용)함으로써 실적주의를 정착시켰다.
- ③④ (×)

• 소극적 실적주의와 적극적 실적주의

- ㉠ 소극적 실적주의 : 19C 말 펜들턴법에 의해 도입된 초기 실적주의는 업관주의의 폐해에 대한 개혁과정에서 등장했고, 공직취임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시험을 통한 공무원 선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 등에 초점을 둔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지님.
- ㉡ 적극적 실적주의 : 20C초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채용 후의 승진, 교육훈련, 성과급보수 등 인사행정의 전과정에서 인적자원을 능력·자격·성과에 의하여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적극적·발전지향적 실적주의. 현대의 적극적 실적주의는 정치권력의 배제라는 전통적인 방어적·소극적 의미와 인적자원의 적극적·효과적 활용이라는 발전적 의미를 포괄. 이는 1978년 미국의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 잘 나타나는데, 각 계각층으로부터 유능한 인재의 모집과 사회집단 간 차별 철폐(대표성 확보), 직무급 외에도 성과급 중시, 정치권력의 배제라는 전통적인 방어적 체제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체제로의 전환(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과 공익에 대한 관심, 내부고발자보호 등을 규정.

답 ②

2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채용 과정에서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소외집단 출신을 공직에 채용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대표관료제에서 할당제를 강요하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관료 입직 이후의 재사회화는 대표관료제의 민주적 대표성을 높인다.

해설

- ① (○) 공직채용 과정에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을 균등하게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 모든 사회계층, 특히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공직진출의 실질적 기회를 보장(결과적 평등)하며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반사회적 성향을 중화시켜 사회적 형평성(수직적 형평성) 확보에 기여한다(실적제의 폐단 시정).
- ③ (○) 대표관료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처럼 실제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역차별의 문제(수평적 평등의 저해)를 야기한다. 더 우수한 능력을 지닌 개인이 종래에 혜택을 받아오던 집단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④ (×)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를 통하여 적극적 대표가 확보된다는 가정 하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제로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대표관료제는 인간의 사회화된 신념이 공직입문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나, 채용 전과 후의 이해관계가 변화할 수도 있고 자신의 신념도 바뀔 수 있다는 재사회화(충원 후 사회화, 2차 사회화) 현상을 고려하지 못한다. 관료의 어떤 정책지향성이 공직입문 전에 형성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충원 후 사회화로 인해 공직입문 후 특정 조직이나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책지향성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공익지향적 태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재사회화는 대표관료제가 추구하는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대표관료제의 특징인 것	대표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
대표성·대응성·책임성·민주성	전문성·능률성·생산성, 대내적 민주성 확보
사회적 형평성, 실질적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성 윤리와의 조화, 형식적 기회균등
결과의 평등 / 수직적 평등의 확보, 수평적 평등의 저해(역차별) 우려	기회의 평등 / 수평적 평등의 확보, 수직적 평등의 저해, 역차별 방지
내부통제, 비공식적 통제의 방법, 민중통제(외부통제)의 내재화	외부통제, 공식통제의 방법
사회집단의 인구구성비율 반영	공개경쟁채용시험, 선거를 통한 임용, 실적과 능력 중시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실적주의와 충돌 가능 적극적 인사행정, 정치적 임용 가능	업관주의의 폐단 시정, 실적주의의 강화, 실적주의와 양립 불가 정치적 임용 배제,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
집단중심의 사고	개인주의·자유주의의 강화, 국민주권원리, 거버넌스적 시각
충원 후 사회화(재사회화·2차 사회화)를 고려 못함	충원 후 사회화(재사회화·2차 사회화)의 고려

답 ④

25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계급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지어 준다.
- ㉡ 계급제는 일반행정가보다는 전문행정가의 원리를 강조한다.
- ㉢ 테일러식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한 것이다.
- ㉣ 계급제는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계급제는 학력·경력·자격·능력과 같은 공무원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rank-in-person)을 기준으로 유사한 개인의 특성을 가진 공무원을 하나의 범주나 집단으로 구분하여 계급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업무의 성격보다는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분상의 격차인 계급(rank or status)이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공무원의 상대적 지위, 자격 및 능력에 차등을 두어 상이한 대우와 직책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 계급제는 공직채용 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시켜 조직전체나 국가전반의 시각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반행정가를 지향한다.

㉢ (×) 테일러식 과학적 관리법의 적용은 직위분류제와 관련된다.

㉣ (○) 계급제는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전직·전보가 용이하며 승진의 폭이 넓어 인사관리(인력활용)의 탄력성·융통성·신축성이 크다.

답 ③

26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쇄효과(halo effect)는 평정자가 중시하는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른 평정 요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연쇄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 ③ 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평가시점에 가까운 실적을 평정에 더 많이 반영하여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 ④ 선입견은 평정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개인적 특성(출신학교, 종교 등)에 대한 편향성을 평정에 반영하여 오류를 유발한다.

해설

② (×)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연쇄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연쇄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은 강제선택법, 프로브스트법 등이다.

평정의 오류	대처 방법
연쇄효과	㉠ 강제선택법이나 프로브스트법을 사용해 평정요소 간 연쇄효과 배제 ㉡ 각 평정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를 순차적으로 평정(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피평정자 전원을 평가한 후 다음 요소를 평가) ㉢ 평정요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유사한 요소의 배치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등 평정요소별 배열순서에 유의. ㉣ 평정척도를 만들 때 등급을 서로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
집중화 경향	강제배분법, 서열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법(프로브스트법)
관대화·엄격화 경향	강제배분법, 서열법
시간적 오류	MBO평정법, 중요사건기록법, 평가센터법, 행태관찰평정척도법
선입견	직속 상사 이외에 제3자를 평정자로 활용

답 ②

27 직무급(Job-based Pay)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적용
- ② 배치전환, 노동의 자유 이동 등의 인사관리 상 융통성 강화
- ③ 직무를 중시하여 개인별 보수 차등에 대한 불만 해소
- ④ 능력 위주의 인사 풍토 조성

해설

② (×) 배치전환, 노동의 자유 이동 등의 인사관리 상 융통성 강화는 연공급(숙인급)의 특성이다. 직무급은 인사관리 상 융통성이 약하다.

• **직무급(Job-based Pay)**

의미	① 직무의 내용·곤란도(난이도)·책임도를 기준으로 한 보수. 직위가 지닌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수. 직위분류제에서 중시 ②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직무분석·직무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장점	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일에 맞는 보수)를 통해 보수체계의 합리성(직무와 보수의 형평성)을 높임. ② 명확한 기준 없이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불공정성이 없으므로 개인별 보수차등에 대한 불만 해소 ③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증명되어야 직위가 부여될 것이므로 능력주의 인사풍토 조성에 유리 ④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연공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효율성 증대)
단점	① 연공급에 비해 직무급의 설계 절차가 복잡함 ② 배치전환, 노동의 자유 이동 등의 인사관리 상 융통성 결여 ③ 직무평가가 주관적이고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음 ④ 연공주의 풍토에서는 저항감 발생

답 ②

28 재정준칙(Fiscal Rul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준칙의 유형에는 채무준칙, 재정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등이 있다.
- ② 재정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
- ③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포함한 국가의 재정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운용정책을 의미한다.
- ④ 미국의 페이고(PAYGO : pay-as-you-go)제도는 의무지출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신규 입법 시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다른 의무지출 감소 등과 같은 재원조달방안을 동시에 입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해설

①③ (○) **재정준칙(Fiscal Rule)** :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으로 수치화 한 목표를 포함하는 재정 운용의 목표 설정과 더불어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법제화 함으로써 재정정책 당국 재량적 재정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재정운용체계(framework)이다. 재정준칙은 목표 변수에 따라 채무준칙, 재정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 '재정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약하고 재정총량에 대한 수치적인 제한을 가하여 재정규율 확립과 재정건전화를 도모한다.'

③ (○) • **PAYGO(Pay as you go) 원칙(수입·지출 균형제도)** : 의무지출의 증가 또는 세입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할 때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 증가나 다른 의무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하여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지만 정책의 신축성을 저해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재원이 확보되지 못해 추진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

예산 내용	경비 성격	적자재정 해소 방안(미국)
의무적 지출항목	경직성 경비	PAYGO원칙 적용
재량적 지출항목	비경직성 경비	총량적 지출상한선(spending caps) 설정

답 ②

29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세금을 줄여 주거나 받지 않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혜택을 준 재정지원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② 조세지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보조금이라고도 한다.
- ③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재정법」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해설

③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답 ③

30 우리나라의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재정법 제49조는 예산성과금의 기본조항이다.
- ②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③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지급대상은 개인에 한정되며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①②③ (○)

•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증대된 수입)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cf)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가능하지만 증대된 수입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단, 지방정부는 증대된 수입도 사용 가능

국가예산의 집행 { 지출 절약 금액 : 예산 성과금으로 사용 가능. 다른 사업에 사용 가능
수입 증대 금액 : 예산 성과금으로 사용 가능. 다른 사업에 사용 불가(지방정부 예산의 경우는 사용 가능)

•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개인(공무원, 국민) 또는 조직에게 지급 가능.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 그 조직의 최소단위 조직에 지급.

• 예산성과금 규정 제1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한다.

-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및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국민제안을 한 자
- 4.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자
-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 조직

답 ④

31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예산은 정부 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이원화한다는 점에서 복식예산(double budget)이라고 한다.
- ② 자본예산제도는 자본지출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심의를 돕는다.
- ③ 자본예산제도는 인플레이션기에 적절한 예산제도로 경제안정에 도움을 준다.
- ④ 자본예산제도는 자본지출의 혜택을 누릴 미래세대와 부채상환의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

해설

- ① (○) 자본예산은 복식예산(double budget)의 일종으로서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수지균형을 이루게 하여 균형예산을 편성하지만, 자본지출은 대부분 공채발행 등 차입으로 충당하여 단기적으로 불균형예산(적자예산)을 편성한다.

계정구분	지출	재원	비 고
경상계정	지출효과가 1년 이내의 연례적·반복적·소비적·단기적인 경상적 지출. 예 공무원급여, 관청사무용품비, 통신비, 국고부담금 등	경상세입(주로 조세 등)으로 충당	균형재정
자본계정	지출효과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예외적·비반복적·투자적·장기적인 자본적 지출. 예 도로·항만·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 자산취득(건물·토지 매입) 등	주로 공채발행으로 충당	단기적 적자재정

- ② (○) 자본적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별도로 관리하여 자본지출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심의를 돕는다.
- ③ (×) 자본예산제도는 경기불황기에 확대재정정책을 위한 자원확보 및 사용을 통해 실업을 해결하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지출 증가와 통화량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가 있다(경기안정화 효과 감소).
- ④ (○) 자본계정에서 지출될 대상은 주로 혜택이 장기간에 나타나므로, 공채를 발행하여 부채상환의 책임을 장래의 납세자(미래세대)도 부담하게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합치되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 자원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답 ③

32 예산 원칙과 그 예외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산 통일성의 원칙 - 추가경정예산
- ②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비비, 준예산
- ③ 예산 공개의 원칙 - 국가정보원 예산
- ④ 예산 총계주의 원칙 - 전대차관

해설

① (×) 추가경정예산은 양적 한정성 원칙이나 단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답 ①

33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증주의 예산이론은 환경의 불확실성과 인간 능력의 부족을 전제로 한다.
- ② 예산 결정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의 변화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③ 예산 결정을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경제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 ④ 정치적 다원주의와 사회의 안정성을 전제로 한 예산이론이다.

해설

①② (○) 예산결정자는 분석능력의 한계, 시간·정보 부족, 대안비교 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전체 예산항목을 검토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기존 결정과 조금 다른 소폭적 변화가 있는 결정을 한다고 본다.
 ③ (×) 점증주의는 예산 결정을 경제적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해당사자들 간 타협·협상·상호적응을 중시(합의·동의의 정도가 좋은 예산의 기준)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토대로 한다.
 ④ (○) 점증주의는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예산과정과 흐름을 설명하는 실증적·기술적 분석이다.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정책결정체제의 안정성만 증시하여 현존 상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적 성격이 강하므로 쇄신적 결정이나 기본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할 경우 점증주의로는 곤란하다. 따라서 새로운 혁신적 변화의 필요성이 적은 안정된 사회를 전제로 한 예산제도이다.

답 ③

34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률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도화되었다.
- ②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 하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① (○) • 행정정보공개제도 연혁

- ㉠ 1992년 청주시가 최초로 정보공개조례 제정(청주시의회가 재의결한 정보공개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제정되었다며 청주시장이 제기한 조례취소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본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로 하지 않다고 하여 합헌이라고 판결) 이후 여러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 ㉡ 199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정
- ㉢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1998년부터 시행
- ㉣ 정부 3.0 일환으로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적 공공정보에 대한 개방을 강화.

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④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답 ④

35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된다.
- ③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록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다.

해설

① (○)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 ③ 제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람(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③ (○)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 2021.10.2.) 내용

◇ 개정이유

LH 등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초래. 따라서 임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했음. 이에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짐.

◇ 주요내용

-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함(제3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 ㉡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제4조제5항).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16 신설).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제4조(등록대상재산)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답 ④

36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③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지 않는다.
- ④ 정당은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해설

- ① (○) 「정당법」 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인 직은 아니지만, 당선되면 임기 중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 ② (×)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③ (○)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없다. 다만, 수사기관장은 지방의회의원 체포·구금시, 각급법원장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 확정시 지체없이 지방의회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 *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 소선거구제(선거구 당 1명 선출)
 - *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 중선거구제(선거구 당 2명~4명 선출)

답 ②

37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왈도(D. Waldo)는 공공윤리를 자신과 가족보다는 광범위한 대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 ② 소극적 의미의 행정윤리는 부정부패, 직권남용, 무사안일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 ④ 현대 행정이 전문화, 과학화되어 감에 따라 행정윤리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해설

- ① (○) 행정윤리는 개인 차원의 윤리가 아닌 일종의 공공윤리(public morality)이다. 왈도(Dwight Waldo)는 공공윤리를 자신이나, 가족, 봉당, 또는 부족보다 '광범위한 주민(more inclusive populations)'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에 의하면, 공공 비윤리(public immorality)는 '많은 주민보다 적은 수의 주민'의 이익에 봉사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주민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 ② (○) • 행정윤리의 관점
 - ㉠ 소극적 관점 : 부패방지, 부정행위 금지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말 것).
 - ㉡ 적극적 관점 : 행정목적의 실현과 공익을 위한 봉사 등 적극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
- ③ (○)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의 비교

구분	근거법률	대상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 기간	철학적 기초
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의무자(정무직, 4급 이상 등)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제한	의무론(부도덕한 동기 실현의 사전 제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자 ②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①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②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퇴직일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결과주의(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

- ④ (×) 현대행정의 전문화·과학화에 따른 외부통제의 한계로 인해 내부통제가 중시되며, 내부통제 수단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 행정윤리이다.

답 ④

38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의원 중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 ②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다.
-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 ① (○)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지방선거 선출직) :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 ②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③ (○) 각 개별법 규정의 개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정권 연령이 18세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주민소환청구권자 연령은 아직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된 개정 법률안은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 주민참여제도 관련 참여권자

연령 조건	주민참여제도	관련 권리자(주민)	
		주민(국민)	외국인인 주민
18세 이상 *주1)	주민투표청구권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주2)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
	주민조례발안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환투표청구권, 지방선거 선거권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주민소송 제소권	지방재정 운영사항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	
	지방선거 피선거권	60일 이상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불가

* 주1) 단,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연령은 현재 19세 이상이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임(국회 통과시 변경 예정)

* 주2) 단, 재외국민으로서 지방선거선거권자는 영주귀국 신고를 안 한 재외국민으로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④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답 ②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 ① 주민소환투표권자 : 주민소환투표권자 기준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주민소환투표권 부여
- ②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 주민소환투표일 전 22일
- ③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 ①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자격 : 주민소환투표 청구일 현재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
 - ㉠ 청구요건인 서명 주민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구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
- ④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 신설
- ⑤ 주민소환투표 비대면 방식(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
- ⑥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 :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⑦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 주민소환투표일 전 14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 전날까지
- ⑧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 도입
- ⑨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
- ⑩ 주민소환투표 개표요건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하지 않음

39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4차 산업혁명을 지식·정보혁명이라고 한다.
- ②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을 핵심 기술로 한다.
- ③ 4차 산업혁명의 사회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으로 설명된다.
- ④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모형으로 FAST(Flatter, Agile, Streamlined, Tech-savvy) 정부를 제시했다.

해설

① (×) 3차 산업혁명을 지식·정보혁명이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초지능성·초예측성 혁명이라 한다.

답 ①

4차 산업혁명

1. 의의

- 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s) 등 핵심기술이 상용화에 의한 '초연결성·초지능성 자동화시대'로의 사회변혁
- ② 클라우스 슈바브(K. Schwab)가 2016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
- ③ 3차 산업혁명(지식·정보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가상적·생물학적 영역의 융합을 통해 사이버 물리시스템 구축.
- ④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 뷰카(VUCA) :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

■ 3차 산업혁명과의 차이 : 3차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기술발전의 속도와 범위, 시스템적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반적인 문화 혁명.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의 활용을 통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생산체제 도입을 의미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분야의 연결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생산을 의미하며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집된 방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분석(빅데이터 분석)하고, 새로운 패턴을 구축하는 인공지능의 발달을 핵심으로 함.

구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혁신기제	동력혁명	분업화된 자동화 혁명(대량생산)	지식·정보 혁명	초연결성·초지능성·초예측성 혁명
특성	offline 혁명(인간의 신체능력 증강)		online 혁명	O2O(online 2 offline), CPS(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기술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모바일, 융합현실, 5G 통신, 로봇공학, 3D프린팅
정부			정부 1.0~3.0	정부 4.0

-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 인간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세계(현실)과 가상세계의 융합(O2O; online 2 offline). 그 동안 산업혁명이 물리적 공간(offline)과 사이버 공간(online)으로 구분되어 발전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두 공간과 시스템이 결합해 불연속성을 극복. 예)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를 이용한 mobile healthcare. 융합현실(Mixed Reality: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 Computer Interface) 등.
- FAST Government :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미래정부 방향. 수평적이고(flatter), 기민하며(agile), 간결하고(streamlined), 기술역량 있는(tech-enabled) 정부.

2. 특징

- ①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 사물인터넷(IoT)의 진화와 만물의 디지털화에 따라 사람과 사물, 공간, 시스템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통신망을 통해 초연결되어 상호의존도가 증폭됨.
- ② 초지능성(hyper-intelligence, super intelligence) : 초연결성에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활용)하여 인간생활의 패턴 파악. 인간과 생물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인간 수준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지능을 갖게 됨(예 자율주행차). 빅데이터와 정보가 클라우드와의 접목을 통해 하드웨어 자체가 스스로 분석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디지털화된 물리적 세계의 객체들이 초지능성을 갖게 됨.
- ③ 초예측성 : 초연결성·초지능성을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통해 인간 행동을 예측. 딥러닝과 같은 첨단 AI는 스스로 빅데이터의 특징량을 추출해 의미 있는 판단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임
- ④ 기타 : 초신뢰혁명(예 블록체인, 암호화폐), 초생명혁명(예 바이오 및 나노 테크놀로지)

40 우리나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 ②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③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해설

① (○)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기관은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단,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예외적으로 인정.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지사 소속)
국가경찰사무 지휘·감독	수사경찰 지휘·감독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정보·보안·외사·경비, 112상황실	범죄 수사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

③ (×) 임기 3년, 연임 가능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제2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답 ③

☞ 우리나라경찰제도 : 절충형 -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이원적 운영(「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년 시행)

